편집자의 말

‘아시아 다시보기’에 대하여

안청시 (편집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들어가며

2011년 6월『아시아리뷰』첫 창간호에서 우리는 ‘아시아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아시아 연구의 개념과 쟁점들을 다시 추적하고, 아시아 연구의 정체성 회복과 미래지향적 경로 탐색을 선도할 수 있는 길을 물어 ‘아시아 다시보기(revisit)’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호는 통권 4호째로 지난 2년의 성과를 중간 결산하는 의미를 지닌다. 지난 2, 3호에 이은 연속기획으로 ‘세계의 중심이동과 한반도’를 테마로 한 4편의 논문과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동향과 전망을 짚어보는 2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문명론의 대관(大觀)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법과 관행, 행동규범의 제정과 실행은 그 기원이 16~17세기를 기점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역사의 의미와 교훈을 되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로를 결정짓는 토대가 500여 년 이전의 세계에 의해서 틀 지워졌으며, 크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세계도 이 굴레에 의해서 직간접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번 호 편집자의 말은『아시아리뷰』창간 2주년을 회고하고, 앞으로 이어나갈 연구와 토론 주제들을 탐색해 보는 시도와 함께 이번 호에 실린 글들을 소개하고 논평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다.

종교와 과학발전의 중심이동(?)

서양문화의 중심에는 오랫동안 기독교가 있었고, 과학발전은 서양문화의 발흥과 세계제패를 가능하게 한 추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편자는 먼저 종교와 과학의 세계를 짚어보는 두 논문을 소개하고 논평하고자 한다.

김흡영 교수의 논문 "그리스도교의 중심 이동과 도(道)의 신학"은 종교학 분야에서 서구의 신학과 동양의 유교사상 사이의 바람직한 만남을 내다보면서 두 종교사상 간의 대화의 여지와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동시에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 '글로벌 동아시아 신학'을 제안한다. 김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서 '이중적 종교 신분', '도의 신학' 등 다소 생소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도전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종교 간의 관용과 대화 및 협력의 장을 확장, 심화해 나가는 기회의 창을 열어갈 생산적인 토론과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사가 시작된 후 최근까지 기독교 신학은 종교적 신념체계는 물론 서양의 사회적, 문화적 삶과 정치체계에 대한 정체성 형성을 지배하는 지주학문으로서 주류적, 특권적 지위를 점유하는 연구 분야와 연구 대상으로 존중되어 왔다. 종교개혁(1517년)이 일어난 이래 지난 500여 년간 기독교는 실로 세계 유일의 보편종교의 지위를 향유해 왔다. 서양의 사회적, 문화적 삶의 기반이 되어왔던 기독교적 윤리기반이 자본주의의 출현을 선도 앙양하고, 그 후 서양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에 앞서 보다 나은 민주정치로 이행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서양 종교에 비해서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명을 지배해 왔던 비기독교적 종교와 믿음체계들을 영원한 비주류, 변방 종교로 취급하도록 방치해 두는 것은 변화하는 오늘의 세계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와 학도들에 의해 이 방면에 대한 연구와 발전적인 문제제기, '다시보기'에 대한 시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기홍 교수는 "동아시아 생명과학의 발전과 바이오시민권의 형성가능성"이란 논문을 통해 2005년 세계 과학계에 큰 충격을 던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스캔들과, 2009년 한국사회에서 과학을 바라보는 시민의 사회의식과 사회 행위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커다란 전환점을 예시해 준 광우병사건의 사례를 분석했다.

일본,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근대 서구제국의 발전경로를 모방 추격해 국가주도형 산업입국론을 채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과학보국', '기술입국', '지식국가' 등의 구호에서 함축되는 바와 같이 과학발전을 민족주의, 국가주의,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 모델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정책이 국정에서 우선순위를 점유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신속하게 끌어올려 모방과 추격, 경쟁 상대국을 잘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과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발전이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의해 이데올로기화하거나 도구적 기술국수주의의 한계에 빠질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과학과 기술 혁신, 창의성 발현에 필수적인 자율성과 보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만큼 보편적 지식의 산출과 첨단 기초과학 분야의 경쟁기반이 취약하다는 제약도 따른다. 뿐만 아니라 과학정책에 대한 투자와 자원배분이 정책 작성자와 자원배분 관리자들의 결정과 관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왜곡되기 쉬운 만큼 소위 정치적 헤게모니와 권력요인이 과학기술을 지배하게 되는 부작용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황우석 사건은 과학입국론과 신중상주의형 기술주의 국가관리 체제의 선택적, 불균형적, 특혜주의적 자원배분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권력현실의 방패 속에 안주하며 특혜를 남용하는 일부 전문과학자 또는 기술주의 과학자 집단이 정부 주도 과학정책의 그늘에서 과학 활동에 요구되는 연구윤리를 침해하고, 업적주의에 치우쳐 과학과 학문 연구의 자기규제력을 훼손하고, 과학 활동의 자율성 존중과 자율 교정능력 상실과같은 폐단을 보여준 대표적 반면교사 사례로 꼽힐 만하다.

황우석 스캔들과 광우병 소동사태로 말미암아 한국사회에서도 과학과 과학자들의 전문주의적 특권 남용과 연구자료 조작, 연구자의 행동윤리 부재, 정파적인 과학 정보의 오남용 등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권리의식이 증대되고, 그 환류효과로 민주적 감시의 투명화와 교정장치 도입 및 절차의 유효화에 관련된 문제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과학 활동과 연구비 사용의 투명

화와 정보 접근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의식과 운동이 고양되고 있으며,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서 시민에 의해 자발적이며 집단적으로 '바이오시민권' 개념이 제기되었고, 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김기홍 교수의 결론은 다행한 일이다.

글로벌 표준화 경쟁과 중국모델(?)

근대 국제사회는 유럽에서 소위 '문명화'된 몇몇 당대의 강대국들이 한 발 먼저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전쟁과 평화를 관리하기 위해 '문명화'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행동규범을 정하고, 이를 상호 공인된 국제법규로 제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국제관계를 규제하는 행동규범은 각자 자기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 지배의 필요 요건들을 찾아 세력균형을 도모하려는 정치현실의 산물이기도 했다. 당초의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 개념은 그 범위가 유럽 안에서도 기독교를 중심 매개고리로 뭉친 몇몇 유럽 국가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1] 여기에서는 기독교권 안에서 통용되는 특정 국가들의 문화와 문명개념 및 종교신조가 일차적인 행동규범과 자격요건의 기준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지리적 경계가 문명국과 비문명국을 구분해 내는 기준으로 통용되었다. 그래서 '서양과 동양', 유럽과 '그 나머지 세계', '문명국과 비문명(야만)지역' 등의 구분 단어들이 통용되기 시작되었다.

그 후 18~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형 국제사회의 기준과 가입조건에서 종교문제가 퇴색되는 대신 지리적으로 유럽대륙에 속했던 독립 군주국가나 세속 주권국가들이 '유럽국제사회(the diplomatic republic of Europe)'의 일원으로 수용되었다. 이어서 남북 아메리카에 속한 몇몇 유럽형 이주국가들에게도 근대적 주권국가의 국제외교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렸고, 뒤늦게 일본을 위시해 중

1 이 때문에 '기독교 국제사회(Christian International Society)'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Hedley Bull. Forward, in G. W. Gong.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v.ii.

국, 사이암(Siam: 오늘의 타이랜드) 등 오늘의 동아시아 국가들도 어렵사리 문명국가 유럽외교단이 주축을 이루는 국제사회에 참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유럽이 근대 이후의 세계사에서 문명의 중심으로 군림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문명의 역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냈다. 그러나 서구 사회는 과거 4~5세기(16~20세기간)에 걸쳐 다른 문명체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의 쇠퇴 위기와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문명의 헤게모니를 지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스와 로마 두 문명을 합친 헬라스 문명 전통을 이어받은 서구사회는 그 전까지 지구상에 나타났다가 명멸했던 다른 문명체들과는 달리 지금까지 해체되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문명으로 간주된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는 6000여 년에 걸친 인류역사에서 명멸했던 21개의 문명단위를 찾아내어 문명의 발생, 성장, 발전, 쇠퇴 및 해체에 대한 비교연구를『역사의 연구』란 저서로 남겼다.[2] 유럽문명을 역사상 가장 보편적인 성공사례로 결론 내렸던 토인비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친 후 냉전의 어두움이 드리우는 전후 세계를 바라보면서 유럽 중심 세계에 대한 전망을 수정하며, 지구상의 "모든 문명들이 소멸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서구 문명도 이 법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그는 1955년의 세계를 "인류가 노아의 방주를 타고 한없이 표류하는 모습"으로 비관적으로 묘사했다(Toynbee, 1946, 8권: 211)

토인비를 비롯해서 19세기 중엽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 속에서 자라난 서구 민주주의의 수혜자들은 유럽이 "승리의 전진을 통해" 세기가 바뀌기 전에 미국을 포함한 서구 문명이 "지상천국에 이를 만큼 인류의 진보를 추진해 왔다"고 믿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한창 활동한 시대에—1950년대로 추정되는—이르러 "그런 확신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 것을 목도해야 했다(Toynbee, 1946, 1권: 17). 20세기에 진입하면서 잇따른 전쟁과 혼란, 불안정 등으로 얼룩진 '증오의 세기'[3]를 거치며 유럽 문명은 세계 정치지도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모시켰다. 유럽의 5~8대 강국들 간의 균형과 우호관계에 의존해 온 국제관계는 서유럽

2 여기서는 A. J. Toynbee. *A Study of History*. D. C. Sommervell의 축약본(1946)을 참고했음. 토인비 저, 김규태 · 조용상 역, D. C. 서머벨 편집.『역사의 연구』1-8권. 서울: 더스타일. 2012.

3 Niall Ferguson. *The War of The World: History's Age of Hatred*. 이현주 옮김.『증오의 세기』. 파주: 민음사. 2010.

국가가 아닌 양대 강국(미 · 소) 간 대립으로 변질했다. 신흥강국 독일의 호전성에 대응해 쇠락하는 영국이 단호하게 자기를 단련하지 못한 채 안이하게 전간기(戰間期) 20년을 끌어오는 동안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4] "대서양문명은 서양의 추락사를 예고하며" 황혼기로 접어들었다.

서구문명의 쇠락이 주는 역사적 교훈을 새겨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국제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아시아와 중국의 부상을 이해하는 담론과 관련된 두 편의 논문을 이어서 소개, 논평한다.

북한이 한 · 미 · 일과 중국의 명시적이고도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핵문제의 해결전망이 난망에 빠져들어 외교와 협상 수준의 해법과 대안 선택의 폭이 줄어들수록 북한정권의 사활을 쥔 배후지원 보루로 남아 있는 중국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중국의 세계관과 대외관계의 지향점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탐색,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김애경 교수는 이번 호에 중국학계 내부에서 중국이 대외관계에서 스스로의 이미지와 비전을 어떻게 정립해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국제질서의 변화와 중국 대외전략에 대한 담론 검토: 중국 내부 논의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글로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중국 학계가 2000년대에 들어,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의 눈이 중국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을 널리 의식하고 있으며, 중국이 세계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수행을 할 때가 당도했음을 공언하는 '담론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구체적인 역할과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론의 패러다임 출현이나, 각종 담론을 담아내고 종합해서 철학적 '둥지'로 통합해 낼 수 있는 중국 학계 내부의 체계화 노력이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이 없다. 김 교수의 논문은 중국 학계의 담론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식 대외관계론과 정책노선을 들고 나서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모델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의 세계적 확산을 견제하는 데는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4 E.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New York: Palgrave. 2001.

김상배 교수의 “표준 경쟁으로 보는 세계패권 경쟁: 미국의 패권, 일본의 좌절, 중국의 도전”은 첨단 산업기술력 경쟁과 정보서비스 시장경쟁력의 선도 부문으로 떠오른 컴퓨터 제조판매와 인터넷 분야 산업의 표준화 문제를 둘러싼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 미국, 중국 등의 민간부문 산업의 표준 경쟁력 비교 추이를 국제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했다. 김상배 교수는 1980~90년대 컴퓨터 산업 시장점유를 둘러싸고 벌어진 미국과 일본의 표준 경쟁에서는 독자표준 수립 추진 전략을 시도한 일본의 정책과 노력이 미국의 글로벌 표준화 전략에 밀려 좌초당하는 과정으로 풀이했다. 또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 시장 부문에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벌인 세계패권 경쟁에서 중국은 미국의 기술표준을 상당 수준 수용하고 따랐다. 그 대신 중국은 ‘중국형 정보화 모델’을 내세워 국가주의 정보정책과 체제관리상 안정우선 정책노선을 견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중국 국내법 준수의무와 ‘정보주권론’을 내세웠다. 인터넷 검색과 지적재산권 문제, 불법복제 문제에서도 유해정보를 검색, 차단 및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맞섰다.

이 사례들의 전개과정을 짚어보건데 인터넷 서비스 산업표준 경쟁에서 미국은 인터넷 자유주의의 확산과 신자유주의 전파와 보편적 글로벌 규범 수호자로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대변한다. 이에 비해 중국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분야의 이념과 표준 경쟁에서 민족주의적 독자표준을 추구하고, 개도국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채 범세계적 규범 수호자로서는 다소 일탈적인 이미지를 투사한다. 지적재산권과 불법복제 문제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에는 정체성 이미지가 충돌하는 모습으로 확인된다.

김상배, 김애경 교수의 두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유의해서 검토하고 주시할 사항들과 함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이 특수성을 내세우는 국가주의적 독자표준 수호의 차원을 넘어 세계 시민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보편적 표준 수립자, 글로벌 표준과 규범 수호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국가주의 대외관의 이미지를 불식해 나가는 글로벌 강국으로 진화해 나가는 모습으로 노선 수정을 해 나갈 것인가의 여부가 주목되는 바,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보편적 국제규범을 강조하는 미국의 표준화 전략에 비교해 보면 중국

은 보편주의, 자유주의, 글로벌리스트라기보다는 특수주의적 태도와 국수적인 정책을 상당기간 동안 그들의 정체성과 정책 선택의 기준과 지표로 고수해 나갈 조짐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대외관계는 상당기간 다른 분야에서도 다소 일탈적 이미지를 씻어내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일방주의, 국가주의적 특수주의, 권위주의, 비타협적 노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새롭게 부상할 글로벌 국제질서 형성의 양대 축을 점유할 미 · 중 간의 표준경쟁과 그 추이는 한반도의 미래와 한국인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외관계와 특히, 중국과의 양자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을 감안하여 우리의 대외정책 구상에 나서야 한다.

넷째, 중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표준 패권 경쟁 양상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표준 경쟁을 둘러싼 이념과 정체성의 차이로만 간주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남북한 문제와 무역, 문화교류, 지적재산권 문제, 특허권과 불법복제 등에서도 중국의 정체성과 노선은 한국의 대외관계 경로를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한 · 미 · 중 3각 관계에서 한국이 구사할 수 있는 대안과 협상력 차이에 비대칭성이 해소될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는 데 있다.

미 · 중 간의 국제 표준화 및 시장점유 문제를 둘러싸고 장차 예상되는 패권경쟁은 21세기의 과학과 기술정책을 둘러싼 경쟁과 패권의 향배를 지적해 주는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김상배 교수는 결론 내린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소홀히 하면 경제적 국익과 안보이익 간의 충돌과 불이익이 예상되는 대외관계에도 난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상의 함의는 한국의 외교와 대외관계를 가늠하는 과정에서 깊이 유의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부연하면 우리 학계도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쟁점 분야와 각종 연구 레벨에서 분출되고 있는 중국 학계의 '자기성찰적' 담론들을 참고해 중국인들이 제기하는 소위 '중국적 대외관계 모델'의 구상, 관점, 쟁점 이슈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동시에 한반도의 미래 구상과 대외관계 목표에 걸맞게 – 독자적 시각과 내재적 관점에서 – 이를 소화하고 활용해 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연구동향

한국의 외교와 국제관계의 핵심은 "방주를 타고 표류하는 모습으로 비유된" 세계사의 파도를 안전하게 넘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공생공영을 도모하고, 평화통일에의 길을 밝혀나가는 데 있다. 민주주의와 인간안보 시대에 걸맞는 국익증진을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지구촌 모든 나라와 지역들을 향해 선린과 우호의 손을 펼쳐 활동영역을 넓히고, 관계증진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두려움과 의구심을 가지고 거부하거나 더 이상 견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도록 합리적이고 설득력을 갖춘 외교 및 국제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변방으로 남아 있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이번 호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연구 현황을 짚어보고, 이들 지역연구의 진작과제를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조원빈, 홍욱헌 교수의 논문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연구가 공히 연구인력 자원, 업적물 축적의 양적 성장세, 관련 전문분야 연구자들의 관심 증대, 주제의 다양성 등의 지표들로 볼 때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두 지역에 대한 한국인의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교통 및 통신의 빈번화와 함께 심리적 거리감각도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인적 교류, 방문 · 관광 · 이민 등 인구의 이동빈도 면에서뿐만 아니라 교류, 협력 및 경제활동의 무대로도 떠오르는 추세다. 시장 진출 기회의 확대에 따라 당연히 지역사정에 대한 정보 소통의 필요성과, 지식 접근에 대한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 예를 들면 미국학이나 동남아학 등에 비교하여 –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뒤늦게 출발한 셈이다. 그러나 조원빈, 홍욱헌 교수는 두 지역연구 분야가 바야흐로 초기 단계의 연구진작을 위한 '보호육성단계'로부터 국내외 영역에서 '경쟁단계'로 옮아갈 수 있는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한다.

연구사의 연륜으로 보아 뒤늦게 출발한 지역연구를 활성화해 연구 수준을 향상하고 연구 결과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제 제기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에 대한 양적 증대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권위 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학의 전문분야별 학술저널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 연구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 연구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대학의 지역정보 처리와 연구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보와 자료 서비스업체들, 산업체, 기업, 대학 간에 보다 유효하게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제의 형성도 요구된다.

맺으며

오늘의 세계정세는 기존 강국인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이란 두 대국이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는 신형 대국 관계 정립에 이르지 못하고 상호견제와 배타적인 영향력 확대 경합이 더 치열해지는 불확실성과 불안정 요소들을 안고 있다. 역사에서 권력 중심지의 이동과 문명의 중심축이 옮겨간 기간에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장막이 덮치거나 전쟁과 폭력, 파괴와 살생으로 점철된 덫을 피하기 어려운 위기국면으로 귀결된 경우가 허다하다. 권력이동과 문명전환기의 국면에서 몰아치기 십상인 소용돌이 속에서는 변방부의 주변 국가들과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이 희생양으로 내던져진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권력중심 이동론과 문명전환의 미래를 점치고 있는 사람들이 예단하는 것처럼, 현금의 세계는 '서양 패권 시대 문명의 끝자락'과 '아시아 시대의 재도래와 여명기'로 전환될 것인가?[5] 과거 서양의 패권과 동양의 추락사를 제대로 짚어볼 수 있다면, 우리는 문명의 진화 방향과 권력중심 이동의 궤적을 조망해보고, 인

5 Niall Ferguson. *The Civilization: The West and The Rest*. 구세희 · 김정희 옮김.『시빌라이제이션: 서양과 그 나머지 세계』. 서울: 21세기북스. 2011: 13.

류의 미래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작금의 '세계의 중심이동과 한반도'의 미래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물음에 유념하면서 부상하는 동아시아와 '중국 모델'을 연구하는 이론과 방법론을 쇄신하고, '아시아 다시보기(revisit)'를 통하여 아시아와 한반도의 미래를 짚어보는 일에 계속 매진할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하면서 이번 호 편집자의 말을 맺는다.

2012년 12월